



2012 ISSUE PAPER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

수행과제명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V):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분석과 환류 활성화 방안

과제책임자 | 김경희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

수행과제명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V)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분석과 환류 활성화 방안

과제책임자 ■ 김 경 희 연구위원
☎ Tel: 02-3156-7187
✉ e-mail: kh99kim@kwidimail.re.kr

요약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연구가 추진체계와 방법론 개발, 정책개선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석 결과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1 배경 및 문제점

- 2012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원년으로 성 주류화 제도 정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목적은 정책이나 법령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분석하여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

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를 정책과정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결과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추진체계 및 도구개발에 집중된 반면,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및 정책개선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편임. 또한 이 제도를 일반국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개선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부족함.
- 이에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참여한 정부기관이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정책개선실적보고서(2008-2011년)에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15개 사업분야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환류를 통해서 정책개선이 이루어진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현황

-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모두 사회복지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가 가장 많이 추진되었고 그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교육분야, 보건분야 등의 과제가 수행되었음.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 현황을 살펴보면 개선안이 중복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음. 그런데 15개 사업분야별로 구분해서 보면, 사업분야 각각에서 성별통계의 생산, 법령 지침의 개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참여, 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등의 각 정책개선 유형별로 다양한 개선안이 도출되었음.

- 연구진이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개선안 중에서 개선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환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례는 부록에 게재하였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사례분석

- 사례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농촌교육농장사업, 지역축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공원조성사업, 국내초청연수사업은 사업추진 주체와 사업대상, 사업추진여건이 상이한 사업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환류에 성공한 사례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턴트, 전문가, 의원 등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담당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또는 컨설턴트와의 교류를 통해 정책환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연구결과 정책환류 활성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성공적인 환류를 위해서는 법률, 조례나 지침 등의 법적 근거를 통해서든 참여의 제도화를 통해서든 정책환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둘째, 제도화 기반조성의 정당성과 근거는 적절하게 분석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찾아질 수 있음.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성인지적 개선방안을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공공정책을 성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주체들을 분석과 환류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에 관한 의견조사

- 이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에 관한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264명이었으며, 총괄담당자 42.8%,

사업담당자 57.2%였음.

- 전문가 면접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22명으로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의원, 의회관계자였음.

●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에 대해 응답자의 86.4%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그 중에서 92.5%는 같은 법에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이는 법 시행에 따라 상반기에 공무원 교육과 컨설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해석됨.

- 응답한 공무원 중 정책개선안 제안 경험과 개선반영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5%에서 45% 정도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안을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개선안의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져 환류로 연결시키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정책환류 경험을 보면, 공무원은 성과관리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을 포함하거나 전담인력 1인을 배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 지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중 환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제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시민단체 활동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 인지적인 정책개선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음.

- 전문가들은 환류 활성화 방안으로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정책환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행주체들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한 젠더 이슈의 발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강화,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모델 개발 등을 제시하였음.

3 정책제언

제안1)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환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근거 규정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면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아직까지 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환류로 연결되고 있지 못함. 이 제도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고 정책환류 과정에 공무원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7조(시민의 참여조성)에서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제안제도 활용,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단체 예산지원 등으로 시민의 숙선 및 자조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사례가 있음.

제안2)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계획서 및 환류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근거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에서부터 분석을 통한 정책개선안 도출, 성별영향분석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을 환류로 연결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기관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이 계획서에는 대상과제의 선정과정과 선정사유,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교육계획, 정책환류 워크숍 및 성과 발표회 개최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은 환류이행실적보고서를 3년마다 작

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 보고서에는 수행기관이 3년간 실시했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안으로 제시했던 사항과 정책환류가 완료된 사항을 구분해서 작성하고, 정책환류가 완료된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임.

제안3)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2012년에 지방 성인지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마련되었음.
-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역사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실행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시 포함할 내용을 제안하였음.

제안4) '성 주류화 위원회(가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의 신설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한 고위직의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하며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환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들이 정책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직접 관여해야 할 것임.
-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 지역개발, 문화관광분야 등 각 사업분야별로 제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사업수행방식, 성별통계 생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제고 등의 다양한 정책개선의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정책환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성 주류화 위원회(가칭)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와 ‘성인지예산 분과’를 설치하고 성인지예산 편성을 위한 심의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제안5)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성인지 담당관’ 운영

- 정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실행주체들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위원회에는 공무원 뿐 아니라 젠더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대상사업의 수혜자인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실행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공무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환류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점이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전문직위제’로 지정하거나 ‘개방형 전문가 임용’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가 3년 이상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중앙 행정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정책환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관내에 ‘성인지 담당관’ 또는 ‘성인지 전문관’을 두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임.

제안6)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분장의 명시와 공무원 교육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업무를 기관의 공식업무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직제 규정의 부서별 업무분장에서 성인지 관련 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대로, 교육참여 경험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제도에 대한 유용성, 인식 및 활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환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환류의
중요성과 환류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고위직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제안7)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문성과 예산지원 확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뿐 아니라 제·개정하는 법령과 계획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정책이 크게 확대되었음.
 - 이에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고 2012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여성정책의 거점기관(focal poin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나타날 수 있는 여성정책에서의 지역간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평가기관의 지원예산과 인력이 확대되어야 하며,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인력의 양성, 평가기관별로 자문단 구성 및 성 주류화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구축되어야 할 것임.

제안8) 현장중심형 거버넌스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확산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지역사회의 일반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생활체감형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행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지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주관하는 ‘성별영향분석평

가 거버넌스 포럼'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의원, 언론인 등이 참여하고 있음. 또한 대전시 등에서는 2012년에 '성 주류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중심형 성별영향분석평가(FGIA: Field Based Gender Impact Assessment)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제안9)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가이드(안) 개발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환류로 연결시킨 사례는 매우 적은 편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정책환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이 제도의 개선효과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거버넌스에 기초한 정책환류 가이드(안)을 개발하였음.



그림 1 | 실행단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4 기대효과

-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사업분야별로 제시된 다양한 유형의 정책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성 인지적인 정책개선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둘째, 정책환류에 성공한 사례분석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환류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이 환류 추진체계를 수립하는데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임.
-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참여하는 다양한 실행주체들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젠더 거버넌스에 기초한 정책환류 가이드를 개발함으로써 이 제도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임.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관계부처 : 행정안전부